

상생·호혜(相生·互惠)를 통한 낙농산업의 발전



배인휴
순천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교수

들머리

한국의 낙농산업은 40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구어 냈다.

2011년 3월 현재 원유 유질은 평균 세균수 18천cfu/ML이며 체세포수 22만 2천개/ML이다

등급으로 보면 세균수 1등급 원유 농가가 98.3%에 달하고 체세포수 2등급 이상 농가가 84.4%에 달한다.¹⁾ 가히 세계 최고의 고품질 원유인 셈이다. 젖소의 연간 두당 산유량(kg/두)은 8,914(2009)로 미국 9,193(2007), 네덜란드 7,876(2007)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면에는 결정적인 취약점도 있는데 원유 가격이 (2011) 한국 852원/ℓ, 영국 460원/ℓ, 미국 437원/ℓ, 뉴질랜드 396원/ℓ에 비해 2배 이상 고가이다.²⁾ 세상 모든 일에 음과 양이 있는 법, 그것을 극복하여 인류 문명은 오늘의

찬란함을 성취하였다. 한국에서 낙농업을 영위하기에는 수많은 제한요소가 많고 선진 낙농국들에 비해 짧은 역사, 불리한 여건이 많으므로 원유나 유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비교우위론이 비판적 경제학자. 관료들 마음속에 항상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낙농업을 경제적 유·불리 논리에 의한 단순비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근시안적 판단력 부족, 나아가 국민 정서와 식문화의 진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단견임이 금방 드러난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낙농산업이 꼭 필요한 것이냐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서 EU·미국 그리고 호주를 비롯한 세계 낙농 선진국들과의 시리즈 형 FTA협약 체결을 밀어붙인다. 그 이후의 결과는 낙농산업의 붕괴, 소멸로 나타날 것임에도 그러하다.

1) 낙농진흥회 2011, 2011 2/4분기 낙농산업동향 p. 72.

2) 기광석 2011, 한·EU FTA 발효 앞둔 낙농산업의 현황과 대책 축산경제신문 6월 20일자. p.3.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나 소의 힘으로 많은 소
출을 얻느니라. 잠언 14 : 4』

이 말은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성경의 잠언
에서 가져 온 교훈이다.

비교우위론자들이 바라볼 때 요즘 유난히도
낙농 현장에서,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낙농진
흥회 원유가현실화협상 회의장에서 머리 띠 두
르고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소리들 때문에 신
경이 쓰일 터다. 이런 저런 낙농가, 축산 농가
들의 외침은 낙농산업을 진보시키려는 아우성
이다. 낙농역사를 한 단계 끌어 올리려는 용틀
임이며 몸부림이다. 이런 낙농가들을 멀찍이서
바라보는 비교우위론자들은 낙농업이 귀찮고
소멸시켜 버리고 싶겠지만, 그 이후를 걱정이나
해 봤을까? 낙농업이 이 나라에 끼친 유·무
형의 유용함을 그들은 상상이나 해 봤을까? 낙
농의 힘으로 얻어낸 소출이 얼마나 되었던지
계산이나 해 봤을까?

국민의 대다수가 이미 연간 34kg의 음용 유
를 마시고 다른 유제품 소비까지 합치면 우리
국민은 어느새 연간 63kg(2010년)의 원유를 소
비하는데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74kg에 버금가는 식량반열에 있는 주요 식량자
원에 해당한다. 우유가 엄연한 식량이라는 것
이며 계속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그들
은 예들러 지나친다. 그들에게 우유가 쌀을 대
체한다든지 우유는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가
곤란한 필수 식량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도

별로 듣고 싶은 곡조는 아니다.

이 순간 우리 국민에게 젓줄인 든든한 미래
식량공급기지 하나가 아슬아슬한 백척간두(百
尺竿頭³⁾)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점에 낙농현장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백가쟁명(百家爭鳴)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저런 해결방안 제시, 낙농산
업 내부에서도 저마다의 부문별 이익 선점을
위한 주장들이 목청을 높일 터다. 필자는 지금
낙농산업 현장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그리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카민 겔로가 쓴
『스티브 잡스 무한혁신의 비밀(스티브 잡스를
움직이는 7가지 특별한 원칙)』⁴⁾에서 다섯 번째
원칙: ‘NO’라고 1,000번 외쳐라. 제10장 단순
화가 빚어내는 우아함의 절정 항은 복잡하고
혼잡한 것일수록 단순화하라고 권한다. 그 회
사의 천재 디자이너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하나의 기기에 너무 많은
것을 담지 않아야 한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
게 되면 복잡해지기 마련이고 결국 핵심가치를
잃어버린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이 없앨 수 있느냐
는 것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단순함으로부터
그리고 단순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용기로부
터 차별화가 탄생한다는 사실이다”⁵⁾

낙농산업의 복잡한 여러 문제를 단순화 하
자. 『상생과 호혜』라는 단순화의 원칙하에 모
든 논의를 집중하자. 지금부터의 필자가 논하
는 것이 곧 『상생과 호혜』를 향해 나아가는 단
순화 논의이다. 좀 고급적인 표현으로 [원-원

3) 백척간두(百尺竿頭) : 막다른 위험에 빠진.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이희승, 1974) 민중서림.

4) 카민 겔로(박세연 역) 2010. 『스티브 잡스 무한혁신의 비밀(스티브 잡스를 움직이는 7가지 특별한 원칙)』 비즈니스북스 p.227-254.

5) 카민 겔로(박세연 역) 2010. 『스티브 잡스 무한혁신의 비밀(스티브 잡스를 움직이는 7가지 특별한 원칙)』 비즈니스북스 p.237.

전략, Win-Win戰略]이다. 생산자와 정부, 정부와 유업체, 생산자와 유업체 간의 상생과 호혜의 원칙 속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보기 위한 단초로 이 글을 마련하였다.

축산업선진화대책이 낙농가에게 다가 온 의미와 정착 방안

그 동안 FMD문제를 겪으며 가뜩이나 축산을 위협 산업인양 언론의 집중포화와 생축 매물, 축산 경영의욕 상실 속에서 잔뜩 움츠리고 있던 축산인 들이었는데 정부가 축산인 들의 막 울부짖으려 하는데 뺨을 때린 격으로 [축산 선진화 대책]에 후려침을 당했다. 그래서 좀 시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오늘 날 축산인들이 처해 있는 입장과 처지는 2009년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모기지 론⁶⁾ 붕괴 사태로 인한 국제 금융한파 이후 연간 서너 번씩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료 값 인상,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악화, 축산물의 소비위축, 농가 부채문제 등으로 국내 축산 여건이 날로 어려워져 있는 때에 나온 것이었다. 더욱이 잠정적이라고 하나 한·EU FTA가 급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었고 피해의 직격탄을 맞는 곳이 축산인데다 향후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강대국들과 FTA 협상이 줄줄이 진행되고 있어, 축산업 존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낙농 부문은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와 FMD 백신처리 등에 따른 유량 감소, 생산비 폭등에 따른 만년적자 경영 등으로 목장 채산

성은 역대 최악으로 극도의 피로감에 휩싸여 있다. 가격 하락에 가슴조이는 육우 부문도 볼멘소리가 나오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동안 FMD로 수개월 동안 폐장 되었던 가축시장이 열리자 출하를 못하던 한우의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하락, FMD로 인한 소비 침체와 경기악화에 따른 소비부진, 쇠고기 수입증가 등에 따른 한. 육우 가격폭락(육우농가는 두당 100만원 이상 적자라고 함)이 낙농가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침체기에 있는 축산현장에 정부가 폭탄과 같은 축산업선진화대책을 던져 놨으니 위축된 축산인들에게는 쓰나미와 같은 황당함이 아니었겠는가?

이번에 정부가 야심차게 내어 놓은 축산업선진화대책은 어쩌면 시기를 잘 못 잡고 태어난 정책이 되어 그 원만한 시행에 난관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선진화 대책은 그 동안 감당하기 곤란한 문제들을 유발했던 [후진적인 낙농 관행]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낙농업의 과학화와 지속적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전기(轉機)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그 시행에 완급을 기할 필요가 있다. 워낙 현재의 상황이 안 좋은데다 정부마저 자칫 낙농현장 실정이나 업계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만 따라 오라는 식으로 밀어붙였다가는 오히려 낙농산업 유지에 맹독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가령 낙농가의 준비기간, 신규제도 적응을 위

6) 모기지론이란, 수요자가 주택을 장만하려는데 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금융기관에서는, 수요자가 구입하려는 주택을 담보로 저당을 잡고 일정 범위내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다 이 대출을 받는 것을 바로 모기지론이라 일컫는다. 그렇게 되면, 대출을 받은 수요자는 최장 30년까지 기간을 두고 대출금을 갚아나가시면 되는 것이다(naver지식인).

한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이 선행한다는 전제 정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축산업 선진화 대책시행에서 낙농가들의 선진화 요건대응을 [자부담원칙]을 들이 댈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생산비 폭등에 따라 적자 경영에서 허덕이는 낙농가 현실을 도외시 한 채 낙농을 하려면 따라오고 아니면 그만 두라는 식의 우격다짐은 정말 곤란하다. 지금은 정부나 유업체가 낙농가들을 다독이고 보호하고 육성해서 함께 안고 가야하는 시점이다. 낙농가들은 지금의 축산업 선진화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는 마치 낙농 폐업촉진 정책, 낙농가 소멸대책처럼 비쳐 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는 헤아려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오히려 낙농가의 생산기반 유지와 개선지원 대책을 펴서 낙농가의 힘을 태워주고 재기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할 때이다. 나아가 정부는 그 동안 FMD와 사료값 앙등, 경영악화로 소진되고 피로한 낙농가들의 마음을 위무(慰撫)하여 강하게 재충전시켜 주어야 할 때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 정부가 제시한 점진적인 시행 속도를 좀 더 유연하게 조절해서 이행해 나가도 결코 늦지 않을 터이다. 또한 정부는 낙농가들이 정부가 축산업선진화대책 추진의 핵심골자로 밝힌 [축산업 허가제]가 낙농가에 대한 이중제재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음도 인지해야 한다. 유럽이나 축산 선진국들이 오랜 역사를 두고 운용하는 [축산업 허가제]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추구할 방향이 친환경축산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정책 수단이 [축산업 허가제]였다. [축산업 허가제]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한국 축산에서 급진적 시행에는 많은 착오와 부작용이 유발되어 축산업 선진화의 발목 잡는 결과가 우려 되는 것이다.

이렇게하면 필자는 어느 전문지⁷⁾가 우려스럽게 제기했던 사안이 떠오른다. 즉 축산업 허가제에 의해 허가를 얻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축산농가 교육에 대한 대안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허가취득에 필요한 교육 시간은 신규 농가 80시간, 사육경력 5년 미만 40시간, 5년 이상 24시간, 소규모 농가 16시간인데 이 교육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3년간 축산업 영위가 금지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중차대한 교육에 대한 준비 자세, 역량은 어디에 와 있는가가 문제이다.

가령 내년부터 3년간 양축농가 23만 명, 축산관련자 4만 명에 신규 축산 취업농 수만 명(축산 귀농자가 농업 부문에서 가장 높게 증가함)까지 한 30만 명을 교육 대상으로 잡으면 정부는 연간 10만 명이상을 이수시켜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수많은 <3년이하 징역형,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축산인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의 시행 자체에 완급을 취하고 현장 여론, 대학, 농민교육기관 실태 등을 파악하여 보다 유연하게 시행해 나가는 것

7) 박유신, 2011, 갈 길 바쁜 '축산업 선진화 교육' 농수축산신문 2011년 6월 17일자 금요일판.

이 생산자와 정부 간의 상생·호혜의 원칙 실현이 아니겠는가? 정부는 정책은 신속히 내어 놓고 그 시행에 대한 여론 수렴과 현장 적용은 유연하게 하자는 것이 윈-윈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인다. 답은 단순화에 있다. 정부는 먼저 낙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제반 전제요건을 구축하고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낙농가는 이에 자발적인 동참을 해주면 된다.

우리 정부의 공격적 낙농 정책 마련이 긴급함

한국의 축산업은 참 질긴 생명력을 지녔다. 광복 이후 보릿고개를 넘어선 한국 농업은 미맥위주 농산업에서 축산이 흥성해지는 농축 산업으로 탈바꿈한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항상 수많은 고통들이 연이어 따르더니 그래도 거뜬히 버티고 일어나 오늘의 축산 대국을 이루었다. 축산업의 규모가 농업 전체 생산액의 34%를 차지하고 경제 규모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농자(農者)를 자처해 온 벼농사의 위상을 제쳐 버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축산업이 이제는 어이없게도 생존권을 논의해야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

그 중에서도 낙농업은 더 심한 지경에 놓여 있다. 필자는 기회 있을 때 마다 누차 언급하였지만 우리 낙농업을 어렵게 하는 일은 사료값 앙등, FMD, 원유 생산성 저하, FTA, 낙농가수의 급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협한 것은 낙농가들의 심리적 위축, 보이지 않는 낙농미래이다. 이러한 때에 앞 뒤 가리지 않고 공격적이

고 전투적이며 급박하게 해야 할 당국의 정책 실행과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2006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매년 600여 낙농가가 사라지고 있는데 필자는 이 현상을 가히 낙농가 엑소더스라고 부른다. 그런데 원유공급을 받아 기업을 영위하는 유업계나 낙농가를 보호, 육성해서 낙농산업을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오늘의 낙농가 현장 이탈을 너무 느슨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한 낙농가가 하루아침에 육성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600여 낙농가를 새로이 육성해야 낙농산업이 현재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대로 성취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지금 상황에서 5년 이후를 내다보면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아찔하다. 가까운 일본이 2011년을 맞이하여 그들의 낙농가 보호를 위해 내 놓은 특단의 조치, 공격적이고 전투 적이며 돌격대 같은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는 얼마나 태평한지 알 수 있을 터이다⁸⁾. 일본 정부는 2010년 12월 24일부로 2011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결정하였는데 이 중에서 낙농관계 사업은 1) 가공원료유생산자 보급금(219억엔, 한화 2,929억 원: 2011년 7월 17일자 엔화의 환율 100: 1337.4) 2) 치즈제조용 원유공급안정대책사업(88억엔, 1,177억원) 3) 가공원료유등 생산자경영안정대책사업(60억엔,802억원) 4) 낙농환경부하경감지원사업(63억엔, 843억원), 그 외에 우리의 축산진흥기금사업과 유사한 “농축산업진흥기구(ALIC)”에 맡겨졌던 사업들[다양한 낙농경영실행지원사업, 6억엔(우량

8) 전낙신문(全酪新報)* 2011. 2011년도 농림수산예산 편성 내역, 2011년 1월 1일자 보도

수정란이식조성), 낙농경영안정화지원헬퍼사업, 3억4천만엔(상병시(傷病時)헬퍼이용 원활화 등]도 2012년부터 낙농경영안정화대책보완사업(5억엔, 66억 9천만원)으로 전환하여 통합하고 이를 국가사업으로 이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만큼 일본의 낙농대책이 민간에 맡길 수준을 떠나 이제부터는 전 국가적으로 추스리고 챙겨야 할 부분이 되었다고 그들은 깊이 인식한 것이다. 일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낙농보호 지원대책 외에도 이러한 새로운 공격적 지원정책을 내어 낙농업을 챙기는데는 그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전술한 1,2,3항은 가공원료유 공급지원사업을 하려고 금년에 시작하는 것 외에는 우리정책에는 아예 없거나 생각도 못하는 것들이다. 그것도 가공원료유 지원 부분에 우리는 겨우 100억 원 수준인데 일본은 367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908억 원(2011.7.17일자 환율 매매기준)이며 한화 5,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해 두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이미 국산 원유생산량의 감소를 막고 유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낙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들 예산의 대부분이 국산치즈생산과 연관있는 사업인 가공원료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를 지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치즈 생산은 국가 백년대계와 식량안보, 낙농 지속

발전을 위해 진흥해야 할 분야로 본 것이다. 일본인들은 1978년 자율적 쿼터제 시행시부터 국산 치즈진흥정책을 펼쳐 왔다. 우리는 아직도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면 일본은 탄탄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치즈대책이라는 차이가 정책의 배경이 된다.

이제 우리 정부가 일본처럼 낙농가 쪽을 지원하고 보호 육성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쪽에도 방향을 늘려가는 지혜가 요청된다. 작금에 정부가 제시한 FTA 이후 낙농발전 대책 구상⁹⁾을 보면 일본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시행하는 공격적 자세와는 크게 대조된다.

1) 집유총량제(전국 쿼터제) 2) 가공원료유 지원 연 20만 톤 3) 낙농후계자의 신규 진입을 위한 쿼터뱅크 운영 4) 목장형유가공업 활성화 5) 시설 현대화 6) 육성우 전문 목장 육성 7) 청정 육종 농가 육성 8) 조사료 재배 확대 9) 도시근교 낙농가 지원을 위한 중소규모 낙농단지 조성 10)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차제에 우리정부가 이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일본 정부의 절반이라도 낙농산업의 보호차원에서 공격적인 자세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 이 정책의 순서가 우선순위를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전국단위 계획생산제를 통한 낙농제도 개편은 자손대대로 물려 줄 혁명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고 공세적인 추진을 요청한다. 그 다음으로 전세의 고삐를 감아줘야 할 분야가 유사 비용을 낮추는 사료가격의 안정화이다. 2009년부터 몰아닥친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환율상승, 고물가 급등으로 배합사료 대와 조사료비

9) 김성인 2011. 목요칼럼- '거대한 FTA폭풍 한반도 상륙' 한국낙농신문 6월 23일자 p.3.

가 천정부지 오르기만 했다. 유사비가 낙농선진국의 경우 40%를 넘지 않는데 우리는 2008년에 그나마 49.7%였던 것이 2011년 4월 평균 58.6%로 약 60%대에 육박하여 유대를 받아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업계의 정설이다¹⁰⁾. 그러다 보니 “아등바등 사는 것은 죽느니만 못하다(迫生不若死¹¹⁾)” 라는 말이 심리적으로 한 없이 위축되어 있는 낙농가들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흘러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 낙농의 유사비를 낮추기 위한 조사료재배 확대 문제는 좀 더 치밀하고 공세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정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국에 널려 있는 경사 25° 이하의 임야와 간척지, 휴경답, 그리고 농지은행이 갖고 있는 논들의 일부를 할애받아 중·소규모의 [조사료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아예 조사료 공급 기지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지방산단의 미사용 토지, 휴·방치 택지개발단지, 방조제, 국유림, 지방림 등도 총 동원해야 한다. 당분간 이 일은 결단코 민간에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1980년대에 시작하여 90년대에 쓰러진 실패로 마감되었던 대대적인 국비를 투입 민간 초지조성사업의 실패를 교훈 삼으시기 바란다. 정부는 우리의 조사료 자급도를 장기적으로 높여 완전 자급에 이르기까지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적인 국책사업으로 단단히 채비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테면 국가기관 중 하나인 농촌진흥청에 이를 전담시켜도 무방하고 아예 [조사료생산·공급공사]를 설립하거나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 조사료를 수입해가며 대한민국 낙농의 장래를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탁상공론이기 때

문이다. 아울러 전국의 축산업의 요충지에 조사료 시장¹²⁾을 개설하여 육성하기 바란다. 그러나 가축시장 옆에 두는 것은 방역상 위험하다.

정부 낙농관련부서는 오늘의 EU,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낙농선진국들과의 FTA 체결에 따른 낙농산업 붕괴직전의 사태를 마치 나라에 난리가 나고 전쟁이 터진 것 같은 상황으로 깊이 인식하고 공격적인 심정으로 긴급히 나서 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원유가 현실화 당위성과 상생·호혜의 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농가들은 2008년 유대 현실화 이후 도입 곡물가 급등에 의한 배합 사료값 앙등, 수입 조사료 값 인상 등이 생산비 증가를 가져왔고 유사비 증가를 가져와 이른바 남는 것이 없는 낙농을 해오고 있다고 호소한다. 그 동안 각종 원자재 값도 인상되었고 가축 진료비며 동물약품 대 인상, 그리고 FMD에 의한 낙농현장의 황폐화를 제기하며 원유가 현실화(인상이 아니다)를 바로잡고 낙농경영 안정화방안을 구축해 달라고 정부와 유업계에 요청하고 있다. 낙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원유가의 현실반영이지, 터무니없이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낙농가들은 앞서 말한 제반 인상요인이 있어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냥 현실화 수준에서 만족하겠다는 속내를 읽어 내주기를 바란다. 유업계는 이와 달리 원유가 인상시(유업계입장에서는 현실화된 가격 곧 지금보다 오른 가격으로 원유를 구입하니까 인상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곧 유제품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유제품 소비둔화가 불 보듯 하기에 합부로 낙농가의 원유가 현실화 당

위성에 동조하기 곤란하다고 멀찍이 물러나려고 한다. 생산자는 원유만 생산하여 유업체에 납유하면 되지만 유업체는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기까지 유제품 소비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생산자는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고 속앓이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물가를 잡겠다고 유제품 가격인상을 억제하려 들 것이고 정부·소비자·생산자 사이에 끼인 유업체의 난감함 또한 분명히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1998년에 우리나라가 IMF통제를 받던 시절에 정부는 각계에 고통분담(苦痛分擔)을 요청하며 공무원들의 급여를 수년간 동결했고 최근 국제금융위기가 지나가던 3년간을 또한 동결한바 있다. 여기서 분담이란 누군가 모두 걸머져야 하는 고통을 여럿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고통을 두루 조금씩 나누어 담당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 담겨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상생(相生)을 떠올리게 된다. 서로를 살려 주면 어느새 서로에게 혜택(惠澤)이 돌아간다. 여기에는 낙농가들이 유업계를 어렵게 하자는 것이 아니며 유업계가 낙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함도 없다. 서로를 끌어안아 주고 수용하며 살을 깎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영역이다. 복잡한 [정부·소비자·생산자·유업체] 사이에 얽히고 맺힌 사정들에서 용신의 틈이 없지만 정부와 소비자를 설득하라. 상생과 호혜의 원칙 속에서 이들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보면 의외로 답은 단순한데서 얻어지

고 실마리는 풀릴 터이다. 차제에 원유가 현실화는 문자 그대로 변화하는 현실의 상황을 적용하는 [원유가 결정의 개정]이므로 이를 두고 더 이상 서로 간에 이견을 내고 갈등조장으로 힘을 소모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생산자와 유업체가 수긍하고 동의하는 공정한 잣대가 없다는데서 출발한다.

필자가 알기로는 1990년대 말부터 원유가 결정의 근거로 인용되어 온 원유생산비조서는 당시 축협을 거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최근에는 통계청에 이관되어 작성되고 있다. 그 내용에는 2000년부터 생산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즐기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으로 표본농가 선정과 조사방법의 문제(전국표본농가라고는 하는데 표본가구와 선정기준은 알 수 없음), 유량의 전국평균 적용(전체 낙농가의 산유량보다 월등히 높게 조사된 두당산유량 기준임), 유사비 중 사료가격 비중과 인상을 적용, 낙농의 노동강도, 근로조건의 특수성(그들은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일 한다)을 포함한 전문성을 고려치 않은 자가 노임책정 등이다.

아마 통계청으로서는 낙농의 특수성을 듣도 보도 않고 달려든 실수가 있었거나 그러한 상세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상대(유업체, 정부)가 있는 사안이고 나름대로 공정성을 담보했다는 당당함을 갖고서 공표를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간다. 필자는 통계청이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안을 제안해 두고 싶다.

13) 한국은 어떤 의혹이 있는 국가 기관,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서명이 있으면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가능한 좋은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 된 나라이다.

14) 필자는 여기서 독립된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중앙낙농통제 기구의 출현을 기대한다.

즉 지난날 원유가 생산비 조서 작성에 참여했던 농협중앙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의 축산관측 팀을 참여시켜 통계청 자료를 포함한 4자 평균치 생산비조서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 나아가 생산자 단체는 통계청이 이를 여전히 공개해 주지 않거나 4자 합동 조사결과 마저도 제시해주지 않을 경우 낙농가들의 뜻을 모은 [국민감사]¹⁵⁾를 청구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공개가 이루어진 공정한 생산비조서를 근거로 이제부터는 일정 주기별 상황 변동을 원유가에 연동시켜 반영해 주는 [원유가 산정의 개정]회의¹⁶⁾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물론 특별 천재지변의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당시의 사정을 반영하는 가변체제도 보완해 두면 될 일이다. 선진국들은 수 세기에 걸친 밀고당기기식의 [원유가 산정]역사를 경험으로 이제는 여러 가지 갈등요소를 정리한 합리적인 가격결정 구조를 갖추기에 이른다. 차제에 이들의 경험과 제도를 우리 사정에 맞추어 벤치마킹할 것도 고려할 일이다.

우리도 이맘때에 이르면 상생과 호혜의 원칙 속에 이러한 결과 도출은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낙농산업도 이제는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 호혜 인식의 출발, 생각의 통합, 공동선을 위한 사과의 공통분

모화가 필요하다.

게임 오버(Game over)

한여름 밤을 달구었던 야구장의 그라운드와 스탠드를 밝히던 외곽등불이 꺼진다. 경기 종료, 그날의 모든 경기가 끝났다는 뜻이다. 게임 오버다. 환상적이면서 유일한 잔디구장으로 유명한 워블던 테니스 경기장의 관중석이 텅 비었다. 게임 오버다. 우리 낙농업계는 그 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수많은 외침을 들었다. “게임 오버(Game over)!!!” 백색 음용유를 가지고 더 이상 원유 소비를 늘리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과거의 소비자는 왕이었지만 현재의 소비자는 신의 반열에 앉아 있다. 그들은 인터넷, 고도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류, 소셜 네트워크(SNS¹⁵⁾)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지녔다. 이 무기들이 북 아프리카와 중동의 정치 소비자들에게 주어지자 이른바 재스민혁명¹⁶⁾으로 불리는 민주화 시위로 그 동안 탄탄히 장기 집권해오던 독재정권 몇 개를 넘어트려 버렸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의 특성, 기질, 성향이 재스민스럽다. 이토록 무섭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소비자 수준을 과거 종이신문 시대의 소비자로 착각하고 있는 곳이 우리네 낙농업계이다. 마시는 우유에 검은 콩, 검은 깨, 현미, DHA, CLA, 첨가

15) SNS (Social Network Service)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트위터·싸이월드·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이다. 웹상에서 친구·선호배·동료 등 지인(知人)과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인맥을 쌓으며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라고 한다. 간단히 ‘SNS’라 부르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라 할 수 있다.(naver 지식인)

16) 재스민은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의 국화(國花)이며 튀니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꽃이다. 23년간 장기 집권한 지네 엘아비디네 벤 알리(Zine El-Abidine Ben Ali, 74) 금년 3월에 튀니지 대통령을 몰아낸 피플파워를 당시 서방언론이 붙여준 시위대 명칭이다(nate지식 홀).

하고 춘향이와 향단이 이도령을 동원한 CF를 때려 대도 2005년 이후의 국내 백색음용유 소비량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34kg 부근에서 전혀 요지부동이다. 우리 소비자들이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 보고 알아 채리는 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잘 안다. 현란한 백색 음용유 광고며 무슨 유익한 물질을 혼합했다는 류의 것들은 “게임 오버(Game over)!!!” 했으니 다른 것을 내어 놓으라 한다. 낙농업계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 생산자들은 유업체를 응원하고 유업체는 백색 음용유 영역을 대체할 시장 하나를 급히 꾸려 형성시킬 책무가 주어져 있다.

유업체와 생산자가 공생, 상생하여 호혜를 누리는 길은 이제부터 백색 음용유 소비시장 규모는 현상 유지를 보장하고 40대 이전의 신세대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신규 제품 시장을 하나 개척하고 육성하는 길이다. 그 시장을 필자는 치즈시장으로 권한다.

치즈 대책은 바로 낙농산업발전 대책

이 주제는 일본의 전낙신보(全酪新報) 2011년 1월 10일자 기사에서 가져 온 것이다.

이 제목은 곧 일본 농림수산성 우유유제품과 (일본은 정부 내에 이런 부서도 있다!!)의 실무책임자인 창중태언(倉重泰彦)과장이 이 신문과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한다.

“일본 정부의 낙농정책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① 부족불제이고 ② 낙농경영안정 대책이며,
- ③ 낙농소득보상제도의 시행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정책의 기저에는 낙농업 자체가 특수한 분야이며 따라서 낙농업은 반드시 보호육성해서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갖추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해 나간다는 기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 기사에서 왜 치즈대책이 낙농경영안정대책이 되느냐는 것을 창중(倉重) 과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치즈 생산. 수요를 차후로 늘려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탈지분유나 버터와 같은 제품 생산용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급금과 치즈 원료유의 보급금 조성의 기본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치즈 원료유 생산 보급금 조성은 원유 수급조정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안정대책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이지요. 한편 유제품의 소비·생산 수요를 신장시킨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치즈의 특색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풀어 보면 이렇다. 일본은 그 동안 가공원료유 보급금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그 중심에 탈지분유, 버터를 두고 시행하고 치즈는 배제하거나 아주 낮게 적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근년에 자신이 시장의 흐름을 검토하고 제품 소비 특성상 원유 소비를 신장시키는 능력이 많은 제품이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니 탈지분유나 버터 보다 치즈가 훨씬 더 유력하고 그 효과가 높다는 점을 새롭게 발견하여 치즈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탈지분유나 버터와 같은 제품은 단순히 저장성을 담보해 주거나 식자재 원료용으로 끝나지만 치즈는 저장성이 탈지분유나 버터와 같은 제품 보다 길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으로

바로 이용하면서 각종 식자재로도 널리 사용되는 장점이 풍부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금년도 농림수산 예산 배분에서 치즈에 대한 가공원료유 보급금을 버터나 탈지분유 쪽에 가깝게 배정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일반회계 예산분야에도 그 경향을 맞추어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국산 치즈산업을 육성시키면 원유소비가 늘어나고 낙농가는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하여 낙농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데에 생각이 이른 것이다. 그가 치즈를 제대로 알고 보니 비로소 낙농 경영안정 방안이 보인 것이다.

나아가 수입 치즈가 늘어나고 국산 치즈 산업이 피폐할수록 낙농산업의 안정성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보였을 터이다. 왜냐하면 원유 소비 확대력을 갖는 것이 치즈뿐인데 치즈를 외국산으로 충당해버리면 외국 낙농가만 좋고 그들의 낙농업은 그 생존마저 위협을 받게 되리라는 미래를 본 것이다. 치즈에 대하여 관료 한사람의 눈이 열리니 이렇게 낙농정책의 기초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듯, 치즈의 잠재력은 유제품 중에서 가장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날로 달라지는 기호성에 무난히 대응하면서 저장성이 높다는 점이 무궁하다는 것이다. 일본이나 우리의 식문화가 미맥위주, 콩 단백질 중심 그리고 발효 식품의 전통성이 치즈의 묘미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백색 음용유 소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치즈 소비 신장률은 매년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나라의 치즈생산과 소비에 대한

대응전략을 보면 그들의 낙농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 담당 관료들도 치즈의 잠재성, 중요성에 해안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나가는 말

대영백과사전(Britannica Encyclopaedia, 1981)은 낙농산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낙농업이란 원유와 그 가공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인데 여기서 원유로 대개 우유를 말한다. : 낙농업은 젖소의 사육, 육종·사양, 관리 그리고 착유가 포함된다. 원유는 반드시 한곳에 모아져야 하고 각종유제품으로 가공되어야 하며 판매되어야 한다」 낙농업은 원유와 그 가공품인 유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복합 산업]인 셈이다.

사실 산업혁명 이전의 낙농업이란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로 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었다. 1851년을 기점으로 낙농업은 아이스크림공장이 미국 매리랜드주 볼티모어에 설립되고 미국 뉴욕 주의 로마(Rome)에 최초의 치즈공장이 세워지면서 비로소「유가공업」이 탄생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원유를 생산하는[낙농가]와 이를 사들여서 각종 유제품으로 가공, 판매하는 [유가공업]으로 나뉘어 있지만 이도 엄밀히 들여다보면 하나인 셈이다.

그래서 여전히 이 두 분야를 통틀어 낙농산업(Dairy Industry)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원유를 생산해주는 낙농가가 있어야 원료공급을 받은 유업체 공장들이 가동할 수 있는 것처럼 낙농가 없는 유업체가 없고 유업체 없는 낙농가 또한 불안한 위치에 서게 된다. 입장과 처지가 서로 비슷한 것이지 누가 우위에 있

고 하위에 있는 상태가 아니다. 지난 40년간 이 나라 낙농산업의 흐름을 보면 생산자와 유업체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상·하관계 또는 갑·을 관계 좀 심하게 보면 주·종관계 같은 상황이 종종 빚어져 왔다. 이는 낙농산업 존립의 근본을 망각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착각이다. 낙농가 없는 낙농산업이 없고 유업체 없는 낙농산업도 없다. 서로가 대등관계, 좋게 말하면 상생과 공생을 돈독히 해야 하는 관계이다. 필자는 대학에서 낙농학과 유가공학을 가르친다. 한번은 [원유생산자] 입장이 되고 또 한 번은 [유업체] 입장이 되는 것이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어느 한쪽도 추겨 세울 수 없다. 이것이 낙농산업의 원래 모습이다. 이제 방향을 잠깐 돌려서 보자. 낙농산업에서 약자처럼 보이고 자칫 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생산자, 즉 낙농가들이다. 그 생각이 깊어지면 낙농업에서 손을 떼고 전·폐업으로 돌아서는 낙농가들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2005년 이후 매년 500~600농가이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내놓은 2011년 6월 낙농가수는 6천호로 작년 동기보다 700호(6.7%)가 감소되었다. 100두 이상 사육하던 전업규모 농가도 100호 감소한 900호에 그쳤다. 정부, 유업체, 낙농가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낙농산업은 있는데 낙농가가 떠나고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기 바란다. 이 추세대로라면 가까운 5년 내에 낙농가는 3,000여호가 남고 그 뒤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나라에는 낙농가가 사라

진 이상한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면 외국의 값싼 혼합분유 사들여 환원유 만들고(소비자들은 지금도 그런류의 가공유는 이미 소비해 주지 않는다) 비싼 북해도 원유나 값싼, 중국산 원유를 수입해다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이 현상이 아직 낙농업계의 쓰나미라 할 수 있는 FTA가 오지 않았고 외국산 유제품이 우리의 유제품 매대에 제대로 접근도 하지 않았는데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면 그 이후는 상상해 무엇 하겠는가? 나는 낙농가는 급속히 사라지는데 유업체들이 신속히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다(최근 다녀온 고창군의 한 마을은 얼마 전까지 25 낙농가가 착유를 했으나 지금은 세 낙농가만 남았다). 그 만큼 유업체들은 낙농가보다는 적응력이 있다는 것이다(지금 유업체의 상당수가 종합식품회사로 변신하였거나 변신 중에 있다). 값은 난관을 헤치고 달려 온 우리 낙농은 국민 경제 성장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원유 유질 세계 최고, 두당 산유량 세계 4위를 기록한 우리 낙농업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발판 삼고, 이를 자본으로 삼아 도약해야한다. 낙농가, 유업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상생과 호혜의 원칙을 중심으로 문제들을 해소하고 우리 낙농산업이 세계 최고 유제품을 수출하여 미래 희망산업으로 발돋움 하자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금은 원유부족으로 난리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초과원유 발생은 낙농가나 유업체에게 해야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지 않았던가? 바로 2010년의

17) 원유의 74.4% 이상이 백색 음용유로 가공 판매(2009년)되다 보니 백색 음용유 소비량이 정체되면 당연히 원유는 남게 된다. 남는 원유, 즉 쿼터 초과원유가 그간 우리 낙농의 아킬레스건이었다.

FMD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낙농가들이 생산한 쿼터 초과원유를 가공하여 판매가 불가능함에도 유업체들은 구입하여 백색 음용유가 안 팔리니¹⁷⁾ 분유로 가공하였고 분유도 소비가 안 되니 재고가 누적되는 바람에 경영난이 가중되었다. 역시 낙농가들도 초과원유라는 것이 엄청난 정상 원유임에도 불구하고 차등제에 의해 정상유대의 반값 이하로 판매되니 결국 생산비도 못 건져 경영 악화가 수년간 지속되었는데 기업으로 말하면 파산 직전을 넘나들었지 않았는가? 결국 양쪽 모두가 어려웠다.

이제부터 낙농의 난관을 어느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힘을 합하여 공동의 능력으로 이겨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낙농산업 각 분야가 겪을 만큼 겪어서 서로가 아픈 부분도 알고 강한 부분도 어디인지 알고 있으니 적정선을 찾아 상생과 호혜를 추구하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바란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해결의 관건은 백색 음용유 위주의 원유 활용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데 온갖 슬기를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니면 아예 생산자로 하여금 원유 생산량을 백색 음용유 소비량만큼만 생산하도록 고정시켜 두는 것이다. 그 외로 생산되는 원유(현재는 약 30만톤)부분은 유업체들은 한국형 치즈제조에 나서게 하고 목장 유가공이 가능한 목장들은 목장 치즈를 제조하여 로칼 푸드로 판매할 수 있는 직관 쿼터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업체 중 유제품 수출입 겸업자들은 수입물량 만큼의 신규 유제품 개발 수출을 통해 우리 낙농산업의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경지가 되면 생산과 유가공업계가

사실은 하나이다. 상생과 호혜의 낙농(樂農)을 즐길 수가 있을 터이다. 우리 낙농산업계가 오늘의 난국이란 상생과 호혜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데서 출발하였음을 재인식하고 이를 가슴에 각인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산적한 낙농산업의 문제는 스티브 잡스의 무한한 혁신의 비법을 인용하면 [단순화와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여[상생·호혜]의 원칙하에 풀어 나간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이 가능할 터이다.

이제부터는 생산자와 유업체간의 상생 호혜의 길을 찾아 따뜻한 동반자로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미래 한국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자손만대 융성할 식량공급 기지 하나를 물려주는 위업을 이 시대 낙농인들이 성취해냈으면 한다. ☺

